

전세버스 빨리 정상 되찾아야

교통신문 | 승인 2020.10.23

유명 관광지를 목적지로 일부 전세버스 운행이 시작돼 큰 다행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나마 완화된 것이 이유이겠지만, 전세버스업계의 혼신을 다한 방역 등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실 부정기적인 운행, 관광객 이용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는 전세버스에 있어 코로나 19는 재앙이나 마찬가지였다. 전체 차량의 90% 전후가 운행을 멈춰 6개월 이상 단 한 차례도 운행을 하지 못한 사례 등 자칫 업계의 소멸까지도 우려됐으나 철저한 자체 방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그 속에서 맞이한 단풍시즌이 어렵사리 전세버스 차량의 가동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전세버스는 전국에 걸쳐 4만대를 웃돌 정도로 공급이 과잉된 상태다. 어려운 시기를 맞으니 공급 과잉으로 인한 문제까지 한꺼번에 업계 전체를 힘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부가 나서 돌파구를 찾아 줘야 한다고 보며, 마땅한 정책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전세버스 부가되는 각종 부담 요소를 줄여주는 것이 마땅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현재 차량제도를 손보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기에 더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본다.

그러나 전세버스의 활로를 오직 정부에만 맡기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다. 업계 스스로도 미래 먹거리를 위해 사심 없이 땀 흘리고 서로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별면허 요구' 등은 업계의 회생을 어지럽힐 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업계가 수십년 동안 사업의 정상화의 모델로 상정한 기업화, 직영화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입제로 연명해오던 일부가 개별면허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가 운수 정책의 큰 방향과 반대되는 주장이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업계 다수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 아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